

정부의 의료질 관련 적정성 평가 및 결과 공개의 문제점

Problems regarding Government Report on Evaluation of Medical Benefits

심 사평가원은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항생제와 주사제 등 약제의 사용을 비롯해 슬관절 치환술에 이르기까지 적정성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건강보험의 목적과 양질의 의료에 대한 국민의 요구 등에 부합하기 위하여 의료의 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적정성 평가는 비합리적인 평가방법과 무분별한 평가결과의 공개 등으로 인하여 의료의 적정성 확보라는 평가의 고유 목적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계의 입장에서는 최근 항생제 적정성 평가 결과의 공개와 관련한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의 적정성 향상을 위한 합리적 평가방법의 마련과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객관적인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는 잘못된 평가결과를 대단한 정보인양 폭로성 공개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현실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국가는 합리적 평가제도를 기반으로 적정성



신 창 륙
대한의사협회 전 보험이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의 결과는 의료기관이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권장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평가방법, 평가대상, 평가결과의 활용 방안 등 합리적인 메커니즘 하에서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학적 근거보다는 재정절감과 정부의 정책 수행에 중점을 둔 심사기준과 지침으로 인하여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신진료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또 다시 비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결과를 획일적 공개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자발적 노력을 근원적으로 저해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더욱이, 심평원은 「2006년 주요 사업추진 계획」에서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비를 가감 지급하는 '진료비 가감지급제도'를 내년부터 시범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평가제도가 심사제도와 함께 옥상옥이 되어 의사의 진료를 제약하고 또 다른 의료왜곡을 야기할 수 있는 불씨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의료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서는 임상 의료전문가들이 각 분야별로 참여하여 표준 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하고 의료기관에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동 진료지침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비임상전문가들이 환자나 질병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의료행위를 획일적으로 규격화하려는 적정성 평가는 방향타 없이 항해하는 선박에 불과한 바, 합리적인 표준진료지침과 의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확충을 선행한 후, 적정성 평가 방법과 결과의 활용 방안을 결정하는 총체적 방향을 재설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간과한 채 적정성 평가가 실시되고 그 결과가 공개된다면, 많은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고 국민들에게 도움은커녕 오히려 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바, 적정성 평가의 합리적인 방향설정을 위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적정성 평가 기준의 비합리성을 들 수 있다.

의료라는 것은 의료전문가가 질병과 환자의 특수성 등을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한 판단에 의거하여 행하는 종합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현행 적정성 평가는 이러한 의료의 기본적인 특성을 무시하고, 단지 특정 행위나 특정 약제를 분리·독립시켜 양적 지표에 의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어, 그 결과에 대한 실효성과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적정성 평가 방식의 문제이다.

현행 적정성 평가는 양적 지표만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등을 평가하는 상대평가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질적 수준과는 무관하게 항상 정해진 비율은 저평가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적정성 평가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재정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셋째, 적정성 평가 결과의 획일적 공개와 활용 방안에 문제이다.

양적 지표에 근거한 비합리적인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의 질적 수준과 무관한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침해하고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을 무시한 왜곡된 정보는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신만을 초래시켜,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근원이 될 것이다.

결과의 타당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평가결과를 폭로하듯이 공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의료평가제도의 근본 목적인 국민보건과 의료의 질 향상에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평가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은 임상의료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권장지침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따라서 평가결과는 처벌 수단이 아닌 전향적인 인센티브 부여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적정성 평가가 재정절감을 위한 수단이라는 과거의 선입견을 과감히 버리고,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의료계와 공조하며 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방향 설정을 재고할 수 있는 여유와 지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㉞

E-mail : shinrok@paran.com